

# 4당 대선후보 사회복지공약 평가

- 사회복지예산, 사회보험 정책 -

## 총평

1.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국민승리21 4개 정당의 후보들의 대선 공약중 사회복지부분을 평가하였다.
2. 평가한 결과 나름대로 의욕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진입하는데 있어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고, 제시된 공약들 조차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특히 실현 가능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산의 확보 부분에 있어 한나라당의 경우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다른 4당의 경우 몇% 수준의 확보 등을 걸고 있으나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취약하다.

## 사회복지예산

한나라당: 서비스의 확대만 있을 뿐, 사회복지 예산을 증액에 대해 언급조차 없어 모순  
국민회의: 매년 30%증액, 2000년대 GNP 5% 달성 공약, 자원조달 방법 모호  
국민신당: 2010년 국제 평균 수준, 5년 이내 OECD 수준 도달, 자원조달 방법 추상적  
국민승리21: 2002년 정부예산 20%까지 확대, 군비축소, 세계개혁 국민적 합의 필요

1.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경제력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95년 기준으로 9.7%로 스웨덴 48.2%(94년), 뉴질랜드 36.9% 는 물론 이란 13.9%(90년), 튀니지 14.3%(92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사회복지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가는 차기정권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 및 향후의 사회복지의 확대를 전망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사회복지예산 확대는 구체적인 자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어야 설득력이 있음은 물론이다.

2. 먼저 한나라당의 경우는 사회복지예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자원조달 방안도 없다. 국민회의는 사회복지 예산을 매년 30%씩 증액하여 2000년대 GNP 5%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자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민신당은 복지부문의 지출증가율을 정부재정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 2010년에 국제평균에 도달하게 한다는 공약, 그리고 보건의료 예산을 현재 1%에서 향후 5년 내에 OECD 수준인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조달 방안으로는 조세부담의 적정화와 조세체계의 개선이라는 추상적인 내용만 제시되고 있다. 국민승리21의 경우는 2002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을 정부 예산의 20%까지 확대하며, 자원조달은 군비축소와 세계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60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사회복지예산의 확대는 기존의 세출구조의 조정 내지는 세금인상과 연결되어 있는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예산확대에 관한 언급은 재원조달과 반드시 병행되어야 '책임있는 공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나라당은 어찌 보면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을 자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나라당이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상당한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는 점과 모순되며, 또한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복지부문의 확대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공약으로 보기 힘들다. 특히 보건의료예산을 5년내에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국민승리21의 경우는 사회복지 예산확대 의지와 재원조달방안간의 형식논리가 갖추어져 있으나 준비축소와 세계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4. 전체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는 다른 4당에 비해 국가사회복지의 확대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회의 등 3개 정당은 사회복지예산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한 반면 재원조달에 있어서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집권이후 이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우리 의 낮은 국가수준, 그리고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회의 등 3개 정당의 자세가 보다 전향적이라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보험 정책

### 4당, 모두 적용범위 전국민 확대, 사회보험 급여수준 확대 공약 대동소이

주요 3당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약 없이 보험급여 확대만을 내세우고 있어 모순

1.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은 사회복지제도 중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4당 후보의 정책공약을 보험의 적용범위, 보험급여수준, 보험료 수준, 기금운용 등 4가지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사회보험의 확대에 있어서는 4당 모두 전국민 내지, 모든 피용자에게 확대를 공약하고 있어 4당간의 차이가 전혀 없다.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4당 모두 급여수준의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의 측면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인하나 현재 수준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승리21을 제외한 3개 정당이 모두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험료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정당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회보험의 급여확대는 보험료 인상이 동반되지 않는 한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료 수준의 인상 없이 무조건적인 급여확대를 공약한 4당 후보의 공약은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며,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험의 기금운용에서 의료보험의 경우는 4당 모두 의료보험의 기금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차이가 없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범위	한나라당		전국민 확대		모든 피용자 확대	
	국민회의					
	국민신당					
	국민승리					
급여 종류 및 수준	한나라당	적정 확대		확대	확대	
	국민회의	대폭 확대				
	국민신당		국제수준 확대	국제수준 확대		
	국민승리					
보험료 수준	한나라당	적정 보험료		영세기업 보험료 지원		
	국민회의					
	국민신당					보험료 인상
	국민승리					
기금운용	한나라당	기금 통합운영	민주적 관리 운영			
	국민회의					
	국민신당					
	국민승리					

비고 : 데모 안의 검은 부분은 각 당 공약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임

2.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보험부분에서 4당 후보의 공약은 국가사회복지를 강화시키겠다는 노선이 잠재화되어 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뿐 사회보험제도를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데도를 엿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언급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공약 없이 보험급여 확대만을 내세우는 공약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며 이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이념이 없으며, 기존의 쟁점이 되던 사항들의 개선방향을 하나 들쭉 모아 놓은 '잡동사니' 공약으로서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 중 사회보험부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국민승리21과 국민회의 등이 사회보험의 가입자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나 산재보험운영에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강화하여 가입자가 정책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완전히 관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의 통제나 혹은 가입자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사회보험의 운영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가입자 참여를 강화시키는 정책 공약은 수급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체적인 평가

각 대선 후보들이 나름대로 의욕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의 복지국가모형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복지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민회의가 제시한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복지기본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하기 위하여 사회개발평가기획단을 설치한다는 공약과 국민승리21이 제시한 부총리급의 사회복지원을 신설하는 공약은 국가의 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상응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